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자산불평등 연구 동향 수집 및 미국의 자산불평등 현황 자료 수집

□ 과제명

- [수탁19-032-00]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3)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 출장기간

- 2019.12.06.(금) ~ 2019.12.12.(목)

□ 출장국가(도시)

- 미국 일리노이주(시카고, 샴페인), 미주리주(세인트루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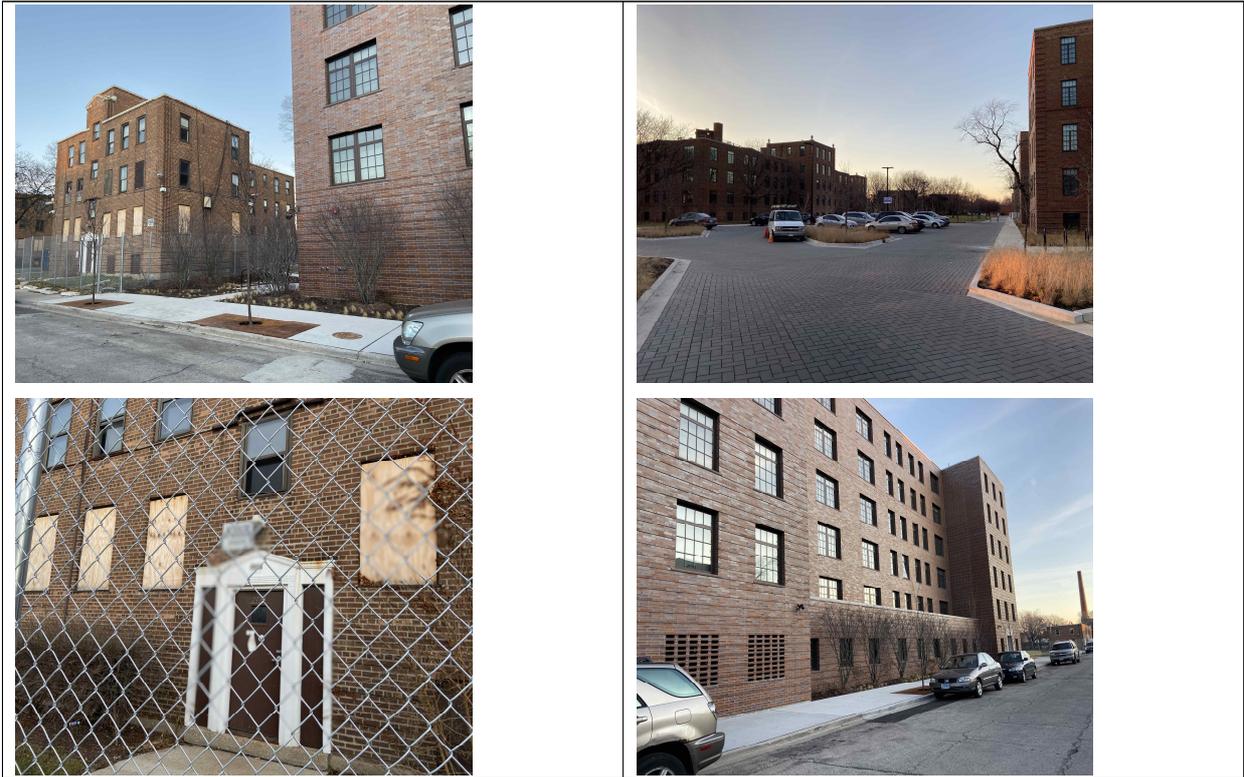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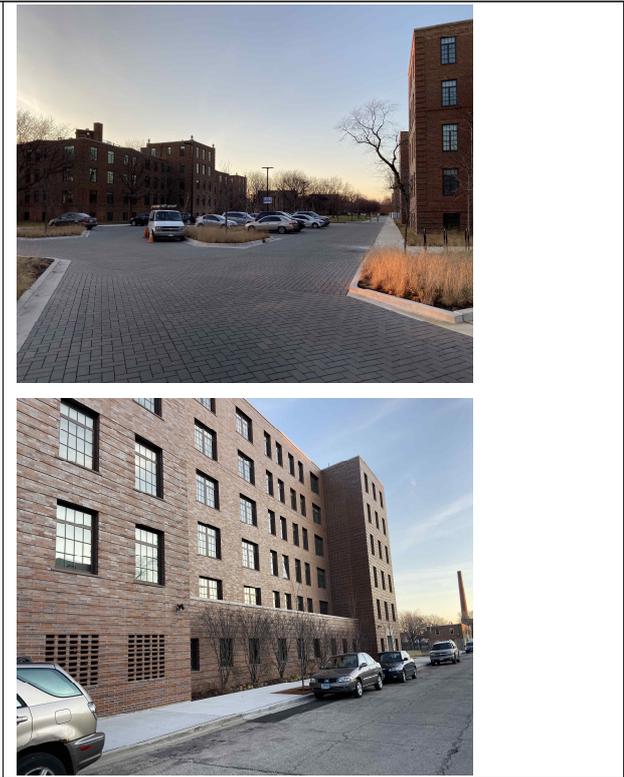
□ 출장자

- 정해식 연구위원
- 고혜진 부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2019/12/6(금)	미국/시카고	시카고대학교	Amy Khare 교수 Patrick, Alison, Jack Lathrop 관리자	mixed-income 프로젝트의 배경 및 추진 경과, 성과 논의 Lathrop 견학
2019/12/7(토)	미국/시카고, 샴페인	일리노이주립대	Andrew Weaver 정지욱, 문은미 교수	도시간 이동 저녁 미팅
2019/12/8(일)	미국/샴페인	일리노이주립대	Andrew Weaver 교수	미국 노동시장 불평등의 주요인 및 정책 효과 평가 방법 검토
2019/12/9(월)	미국/샴페인	일리노이주립대	Gaurav Sinha 박사수료	미국 청년층 자산불평등 양상
	정지욱, 문은미 교수		최근의 노동소득 불평등 양상 및 불평등 비교 연구의 쟁점	
	미국/세인트 루이스	워싱턴대학교	전용, Brinda Gupta	도시간 이동 사회정책연구소 및 진행 프로젝트 관련 논의
2019/12/10(화)	미국/세인트 루이스 시카고	워싱턴대학교	Stephen Roll 교수	자산불평등, 재정불안정성의 측정
			Olga Kondratjeva 전용 연구원	사회정책연구소 견학
				도시간 이동
2019/12/11(수)	미국/시카고			귀국 출발
2019/12/12(목)	한국/인천			귀국 도착(일자 변경)

2 | 출장 주요내용

①	Chicago mixed income project 추진 배경 및 성과, 한계 Lathrop 견학 (시카고 mixed income 프로젝트 사례)
일 시	2019.12.06. 금요일 14:00-17:00
장 소	시카고 Hexe coffee co., 시카고 Lathrop 아파트 단지
참석자	Amy Khare(Research Assistant Professor, Case Western Reserve Univ.) Patrick, Alison, Jack (Lathrop 관리자) 정해식, 고혜진 (이상 KIHASA)
<p>○ Lathrop의 역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년대 후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공공주택 단지 건설 초기에는 백인 저소득층(당시에는 주로 이민자)들에게만 공급 - 1980년대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거주자들이 다수 이사하기 시작하고 각종 범죄 등 심각한 문제 발생 - 1999년에서 2000년 경 연방정부가 재개발을 시작하고 mixed income project를 통해 여러 소득계층, 여러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공간으로 탈바꿈 - 최근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80년대 리모델링한 건물들은 낙후됨. 이곳을 불법 점유하는 경우도 발생 	
	
<p>낙후된 Lathrop 불법 점유를 막고자 철조망을 설치하였음.</p>	<p>신축한 Lathrop 거주민에 충분한 주차공간 제공(1층 주차공간) 보도블럭 등이 잘 정비된 모습</p>



입주자 모집 표지판

- 미국 공공주택 정책의 세 가지 흐름
 - 공공주택 정책
 - 보조금 지급 정책
 - 이상에 더해 공공서비스 제공

- mixed-income project의 목표
 - 저소득층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 제공
 - 부유한 가구의 유입을 도모하여 과세 기반 및 도시 안정성 제고
 - 저소득층의 상향 이동을 도모하는 환경 조성
 - 물리적, 경제적 소생 촉진

- 기존의 낡은 주거를 개선하여 일정 규모의 저소득층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산층 가구의 유입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 “building community: 개인(person)이 아니라 공간(place) 차원에서 접근

- mixed-income project의 성과
 - 공공주택 단지 거주자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 공공주택 단지에서 발생했던 범죄, 폭행 등의 문제, 게토화 문제 등 해소
 -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높음

- mixed-income project의 한계
 - 기존 연구에서 소득 계층간, 인종 간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 지적
 - 실제로도 네트워크 형성이 원활하지는 않다는 평가, 특히 흑인 등 소수 인종의 배제, 낙인 문제 존재
 - 엄격한 감시, 강력한 규범의 적용 등으로 낙인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함.
 - 단, 시카고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Lathrop은 강을 끼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교 활동이 단지 내에서 교류가 적지는 않은 편

* mixed-income project는 도시 빈곤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으로, 개인을 넘어서 개인 간, 개인과 지역사회 등 다차원적 프레임워크에 기초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차원의 통제의 활성화, 사회적 규범의 학습을 통해

저소득층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획득하고, 빈곤 문화를 타파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

-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공공주택 단지의 주거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개선됨에 따라, 중산층 이상 집단에서도 이주를 선호함

집주인, 민간 주택 공급업자 등은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적음.

저소득층이 공공주택에서 밀려나는 양상 (Lathrop에는 30%가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함.

- 저소득층 mixed-income project 공공주택 거주자 당사자의 빈곤 지속 오바마 행정부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choice neighbor initiative 추진 (10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

○ mixed-income project의 한계를 초래하는 이론적 배경

- 빈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차원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
- 프로젝트의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는 민간 행위자들- 빈곤 문제 해결 등이 주요 목적이 아님
- 개인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 - 개인의 선택을 제약하는 현실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②	미국 노동시장 불평등의 주요인 및 정책 효과 평가 방법 검토
일 시	2019.12.07. 토요일 15:00-17:00
장 소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Andrew 교수 연구실
참석자	Andrew Weaver (이상 일리노이주립대학교 고용, 노동관계학과) 정해식, 고혜진(이상 KIHASA)

○ 미국 노동시장의 특징

- 북부 지역에서 인력 수급이 용이한 남부 지역(히스패닉의 유입)으로 다수의 제조업체들이 이전하여 북부 노동시장 위축, 질적 저하 문제 발생
→ 미국 노동시장 분석에서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
- 내수 시장의 규모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한국과 즉자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
- 또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직종이 지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고용계약을 맺음 → 한국에서는 고용 계약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뉘고 이들 간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데 미국은 이 구분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미국은 기업 내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전략(make)보다는 외부에서 유입하는(buy) 방식 - 비용 절감 용이
- * 훈련, 숙련을 강조하는 국가로는 독일, 일본이 대표적

○ 미국의 불평등 문제

- 대체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음 (다른 측면에서 이는 소득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함)
-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자산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측정 상의 한계 등으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임.
- 미국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은 제도적 요인을 강조하는 측면과 고속런 기반의 기술 개발임. 전자의 경우는 노조 및 노조의 협상력 약화,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과 같은 세계 경제 요인, 실질 임금 상승 수준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해당됨.

○ 정부 정책의 효과 분석 시 주의할 점

- 정책은 당초 예상했던 효과를 항상 담보하지 않을 수 있음. 부작용, 부가적인 효과 등이 검토되어야 함.
- 정책에 대한 주요 노동시장 행위자들의 반응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피고용인 혹은 근로자 측면에서의 효과뿐 아니라, 고용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함.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크게 논의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는데, 고용의 양, 질에서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함의를 지님.

③	미국 청년층의 자산불평등 양상
일 시	2019.12.09. 월요일 09:00-10:30
장 소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사회사업학과 2027호(강의실)
참석자	Gaurav Sinha(일리노이주립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정해식, 고혜진(이상 KIHASA)

○ 미국 내 청년 부채 문제의 심각성

-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한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
- 그러나 미국 대학의 높은 학비 문제로, 학자금 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12조를 넘는 수준이라는 보고
- 학자금 상환을 하지 못해 파산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
* 대학 진학률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는 학자금 대출자의 수는 적을 수 있음.

○ 미국 청년층의 부채 문제가 초래하는 다른 위험성

-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 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 차원에서의 문제 초래
- 인종적 소수자들이 특히 충분한 재정 정보를 갖지 못하여 재정적 위험에 처하는 경향이 있음
- 청년기의 부채 축적이 향후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

- 청년층의 자산 축적에 유용한 전략
 - 재정 관리 관련 교육의 제공, income-based repayment initiative 추진이 효과적인 상황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됨
 - 기본적인 재정 관리, 계좌 개설과 같은 정보 제공 교육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
 - 미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일 수 있어, 한국에 바로 적용하긴 어려울 수 있음.
 - * 미국과 한국의 금융, 신용 시장의 차이
 - 미국에서는 신용이 매우 중요하여, 부채를 진 뒤 충실히 상환해 신용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경제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income-based repayment initiative
 - 소득 수준 및 가족규모에 따라 상환액의 상한액, 한일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정부 개입 프로그램
 - 현재 다섯 개 유형이 있으며, 유형마다 자격 요건, 상환 기간, 할인율 등이 상이함.
 - 졸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생들이 주요 대상이 됨.
 - * 교육의 수익률이 높다면, 청년 자산불평등 문제는 대출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닐 수 있음. 고졸 이하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개입을 고려해 볼 필요.
 - 관련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 (저활용의 원인)
- 2015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udy
 - 2009년부터 매 3년마다 재정역량(financial capability)과 이를 결정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행동, 태도, 재정적 문해력 등을 파악하고자 FINRA Investor Education Foundation이 진행하는 조사
 - * 횡단면 조사임.
 - 25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주별로 500명)
 - 인구사회학적 요인, 재정관련 태도 및 행동, 은행계좌, 퇴직연금, 공공 복지혜택, 주거 및 모기지, 신용카드, 기타 부채, (건강)보험, 자가 평가 및 문해력 등으로 구성
 - * 재정 역량은 소득 대비 소비 수준, 의료비 부채,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금 보유, 은행 대출 보유 여부,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측정

④	최근의 노동소득 불평등 양상 및 불평등 비교 연구의 쟁점
일 시	2019.12.09. 월요일 11:00-13:00
장 소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건물 1층 카페
참석자	Jiwook Jung, Eunmi Mun (이상 일리노이주립대학교 고용, 노동관계학과) 정해식, 고혜진(이상 KIHASA)
	○ (노동소득, 임금) 불평등 논의에 대한 관심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차 낙수효과를 벗어나서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는 경향이 나타남. (불평등

문제를 간과했던 경제학자들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 미국 사회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악화가 심화되면서 정치적인 요구로도 확산되고 있음.

○ 최근의 임금 불평등 양상 논의

- 회사 내에서의 불평등 수준은 줄어들고, 회사 간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
- 최근 진행한 비교 연구에서도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회사 간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남.
- 이는 부수적인 업무에서 하도급 업체를 활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 주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은 직접 고용하나, 부수적인 업무는 하청업체에서 전담하여 모기업과 자회사, 하청업체 간의 임금 차이 발생

○ 임금 불평등 비교 연구에서의 쟁점

- 최근 한국과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 여러 국가를 포함한 10개국 임금 불평등 비교 연구 수행 (under review 중)
- 행정 데이터가 소득과 관련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전세 계적으로도 활발한 편임.
 - * 양질의 행정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나라와 협업하려는 학자들이 많음. 덴마크가 대표적인 예임.
 - * 말라위도 질병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말라위 사례 연구에 몰두하기도 함.
- 다만, 어느 나라에서나 행정데이터로 자산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향
 - * 덴마크에서는 부유세 자료로 자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나, 부유세를 납부하는 중산층 이상의 정보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즉, 저소득층의 자산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움.
- 또한 국가마다 행정 데이터에의 접근성은 물론 그것의 질과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
 - *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정확하고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함.
 - * 중화권 국가는 불평등이 심각해 정부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 데이터 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
 - * 일본 역시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매우 소수의 데이터 생산자들만 접근 가능함. 대체로 총량 변수만 레포트 형태로 제공.
 - * 네덜란드는 전 사업장 모든 정보가 있지만, 교육 및 직종 정보가 부족하고 정확하지 않아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움. 아울러,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코드를 보내면 결과 값만 전달해줌.

○ 소득불평등의 구조적 특징 파악을 위한 행정자료 분석

- 임금불평등이 기업 간 수준에서 점점 커진다는 점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종사 기업의 정보가 포함된 서베이 자료, 또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 정보와 같은 행정자료 분석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

-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자료 활용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⑤	워싱턴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및 진행 프로젝트 논의
일시	2019.12.10. 월요일 17:00-19:00
장소	워싱턴 대학교 Hillman Hall 1층
참석자	Yung Chun, Brinda Gupta(이상 워싱턴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정해식, 고혜진(이상 KIHASA)
<p>○ 워싱턴 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Social policy institu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9월 Brown school이 아니라, 대학 본부 직속 편제의 단독 조직으로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독립 - 목적: 사회복지학뿐 아니라,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약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직 구성: 현재 조직 내 연구인원은 5명/ 행정 직원 10 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직 중 다수가 행정학 박사 학위 소지자 - 이스라엘, 민간 기관 등과의 원활한 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사회연구원의 미션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여러 연구가 워싱턴 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의 추진 프로젝트들 중 유사한 것이 많아, MOU 체결에 관심을 표함 <p>○ 워싱턴 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추진 연구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총 8개의 프로젝트 진행 중임 - 각 프로젝트는 다양한 공공, 민간 기관과의 협업에 기초하여 진행 -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행동경제학적 접근에 따라 정책의 직접적인 실행 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자산 불평등 관련 연구로는 “Refund to Savings” 와 “Household Financial Survey” , 이스라엘에서 “Child Development Accounts in Israel Research” 가 관련됨. <p>○ Refund to Saving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부터 turbotax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Intuit와의 파트너십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혹은 중위소득자의 세금 환급금의 저축 유도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 한부모 가구면 비교적 세금 환급에서 관대한 혜택을 받게 됨 - 2018년부터는 더 나은 채무 관리를 돕는 것으로 확장 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유동성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자산 형성, 채무 축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중 * 재정 교육, 상환 계획 설계 등을 제공 - turbotax 프로그램 비 이용자들과의 비교에 기초한 정책 실험적 접근 활용 중 	

- * 미국은 turbotax 이외에도 세금 정산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흔함.
- * 한국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국세청 홈택스)으로 세금 환급 관련 절차가 일원화되어 있어, 이들의 정책 실험 접근을 해당 영역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단, 다른 영역 예컨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 등에 대한 연구 설계 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이스라엘 “Child Development Accounts in Israel Research”

- 이스라엘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임.
- 이스라엘은 2017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보편적인 아동발달계좌 도입
- 프로그램 포괄범위 확대, 인적자원 축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의 개편 추진한 것임.
- 18세 미만의 3백 만명에 달하는 아동에 대한 개입이 이뤄져,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는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고 내년 2월에는 시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축적을 도모하고자 한국의 희망키움통장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자산 형성, 자산 불평등에 관해서는 아동 문제(18세 미만)로 논의 중인 듯

⑥	자산 불평등, 재정 불안정성의 측정 워싱턴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견학
일 시	2019.12.10. 화요일 11:00-13:00
장 소	워싱턴 대학교 Hillman hall 158호
참석자	Stephen Roll, Olga Kondratjeva, Yung Chun(이상 워싱턴대 사회정책연구소) 정해식, 고혜진(이상 KIHASA)

○ Household Financial Survey

- 2013년부터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진행해왔던 자료 조사로, 현재는 워싱턴 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에서 수행
- 자산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자료 원천.
 - * 세금 관련 행정 데이터와의 연계 가능
 - * 미국은 Howard가 지적해온 것처럼 조세지출이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불평등 및 빈곤 해소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Hidden welfare state) 특히 이 정보는 미국 복지국가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임.
- Refund to Savings와 마찬가지로 turbotzx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Intuit와의 파트너십으로 추진하는 사업
 - * 3만 가량의 turbotzx를 이용해 세금 정산을 막 마친 저소득층과 세금 정산 후 6개월이 지난 약 1만 명에 대해 기본적인 가구의 인구 사회학적 정보와 자산 및 부채 현황, 자산 위험에 관해 질문
- 최근에는 각 경제(Gig economy)에서의 저소득층의 고용 및 자산 관련 행태

변화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EITC 확대에 의한 물질적 결핍의 변화도 파악 중임.

* 저소득층의 플랫폼 노동 종사 관련 연구를 최근 진행 중임.

○ 자산 불평등의 유용성

- (근로)소득은 노력에 따른 댓가로 이를 개선하는 데 막대한 재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저항이 큰 편
- 소득 그 자체보다는 자산의 규모, 특히 재산의 세대간 이전이 불평등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 자산 불평등 논의와 관련된 개념

- 개인 수준에서의 재정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음.
: Financial(Economic) Hardship, material hardship, Financial(Economic) insecurity, Financial(Economic) stress, Financial(Economic) well-being 등
- * Financial과 Economic 간에는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술적으로, 측정 상에서도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
- 실업이나 의료비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비용에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원을 강조하는 Financial resilience도 활용

○ 자산 불평등 논의 관련 개념의 측정

- 소득을 기초로 한 접근에서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approach)를 활용한 객관화된 측정 방식을 활용해왔음. 주로 소득 대비 소비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이었음.
- Financial(Economic) well-being은 주로 주관적인 응답에 기초하여 총체적인 재정 상태를 측정하는 경향 (5-10점 척도)
- Financial(Economic) Hardship, material hardship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 응답에 기초함. 예컨대 몸이 아파도 의료비용이 부담되어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는 지 등과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이 해당됨.
- Financial resilience는 소득이 없이 1개월 내지는 3개월 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응답으로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 Financial(Economic) (in)security는 재정 상태에 관한 여러 지표의 평균 값에서 벗어난 정도(표준편차 활용)로 측정하곤 함. 즉, well-being이나 hardship, resilience 등이 개인 단위에서만 측정되는 것에 비해 이는 자산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전체 집단 내에서의 위치, 정도로 측정함.

○ 재정 불안정성에 관련된 최근의 논의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

- 재정적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실업에 처한다 하더라도 불안정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 전술한 것처럼 실업이나 의료비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비용에 개인이 대응할